"광주·전남에 시스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해야"

국회도서관서 토론회…"미래 100년 열자" 한목소리 姜시장 "전국 유일 공동 추진"…숲지사 "원팀 기반 구축"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해 광주·전 남에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필요하다 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2일 국회도서 관 강당에서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 지역 국회의원, 반도체 전문가 등이 참석 한 가운데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육성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회재·양향자·이용빈 국회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도와 전남도 의회,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육성 추진위원회, 한국과학 기술단체총연합회 광주전남지역연합회 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선 국내외 반도체산업의 현 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광주 전남의 역할 등을

주제발표에 나선 김종갑 추진위원장 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전남이 지역 강점을 십분 활 용해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광주·전남의 강점으로 ▲R E100 실현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 ▲풍부 한 전방산업 수요 ▲준비된 부지·용수· 물류망 등 인프라를 꼽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정호 한국과학 기술원(KAIST) 교수를 좌장으로 김형 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 민병 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이창한 한국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이용필 산업통 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이 패널로 참석해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을 위한 방향과 추진 전략에 대해 폭넓은

개회사에서 강기정 시장은 "반도체 특 화단지 유치를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해 추진하 는 곳은 광주·전남이 유일하다"며 "우리 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 반드시 성공시켜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육성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 원, 반도체 전문가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광주·전 남이 선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의 근 다.

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김영록 지사는 "재생에너지와 용수, 인력공급 등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강

화를 위한 좋은 여건을 갖춘 광주·전남 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돼야 한다"며 "광주와 함께 원팀으로 우리나라 미래 1 00년을 이끌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 반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8기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지역 주력산업인 인공지 능(AI)과 전력, 자동차 등과 연계한 'AI (인공지능)기반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특화단지'를 시·도 접경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강점을 내세워 반도체특 화단지를 유치·조성해 반도체산업 생태 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은 대한민국 미래 반도체 경 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 고 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 지가 풍부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RE100 을 실현할 수 있으며, 전남대, 광주과학 기술원(GIST), 한국에너지공대 등 우 수대학을 통한 인력 양성과 충분한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시·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 가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로 예정된 정부 의 공모 심사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재정·박선강기자

5·18 진압 동일 기종 헬기·장갑차 전시 찬반 논란

시의회 "피해자 트라우마" 예산 삭감 vs 市 "역사교육 활용" 재추진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진 압에 쓰인 같은 기종의 헬기와 장갑차 등 의 이전 전시·계획을 세운 가운데 시의회 가 제동을 걸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역사 교육 등에 활용하겠다는 취 지지만 시의회 상임위는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 정자치위원회는 최근 광주시 민주인권 평화국 내년 본예산 심사에서 5·18 출동 기종 장비 이전·전시 예산 1억5천만원

을 삭감했다.

광주시는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것과 같은 기종으로 폐기를 앞둔 장갑차 3대, 전차와 헬기 1대씩 모두 5대를 군부 대로부터 넘겨받아 5·18 자유공원에 전 시해 5·18의 상흔을 되새길 역사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피 해자들에게 트라우마나 2차 피해를 불 러일으킬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당·북구2)은 "5·18 상처는 아직 아물지 못했고 작은 충격에도 진물이 흐른다" 며 "다음 세대로 나아가야 하는 관련 사 업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 게 다뤄져서는 안되고 진지한 고민과 담 론 형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 5·18유공자 2천 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 과, 피해자 중 절반 가량은 지금도 트라 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980 년 이후 40여년이 지나도록 전일빌딩 앞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 을 지나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다"며 "5.

18 출동 기종 장비 이전 전시사업은 5·1 8 유공자와 각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의 장을 열어 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는 시의원들을 설득해 예산결산 특위 심사에서 예산을 되살릴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 편성 당시 5·18 관계자들로부터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을 들었다"며 "군 장비 옆에서 고통받는 시민의 모습이 담긴 당시 사진과 함께 전 시하면 엄혹한 환경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선 시민정신을 알리는 사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깨끗하고 품격있는 외식문화 조성 힘쓴다

道, 음식문화개선 워크숍

전남도는 지난 2일 깨끗하고 품격있 는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씨한국외식 업중앙회 전남지회·지부, 시·군 공무원 을 대상으로 2022년 음식문화개선 워 크숍을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했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지회와 공동 개최한 워크숍에는 유현호 전남도 보건 복지국장, 송기현 한국외식업중앙회전 남지회장, 한국외식업전남지회·지부, 시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외식산업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친절하 고 깨끗한 음식문화로 바꾸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위생적인 음식점 환경을 위한 위 생등급제 지정 확대를 위해 한국식품안 전관리인증원 심사관을 초청해 위생등 급 지정률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활용 방법 및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천 방안 등을 공유 /김재정기자

담양 응용리·태목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마한 대규모 취락지

문화재청이 고대 마한의 대규모 취락 지로 시기별 변화상을 보여주는 담양 응 용리와 태목리 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담양 응용리와 태목리 유적 일원은 2003년 고창-담양 간 고속도로 건설 시 처음 발견됐다. 북 광주IC 조성 전 발굴조사, 4대강 살리기 영산강권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태



담양 응용리 · 태목리 출토 유물

의 시·발굴 조사를 시행, 담양 응용리와 태목리 유적 문화재구역 내 약 1천500기 의 유구가 확인됐다.

삼국시대 한반도 중서부·서남부 지역 의 토착세력(마한)이 2-5세기를 중심시 기로 영산강변에 조성한 대규모 취락지 다. 당시 마을 구조, 규모, 시기별 변화상 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적이다.

마을의 주거 구역에는 거주지를 기본 으로 토기가마, 저장수혈, 공동창고 등 암유물산포지'로 보고됐다. 이후 5차례 이 확인됐다. 특히 좁은 공간에 거주지

유구가 겹겹이 중복된 점은 마을이 형성 된 이후 오랜 기간 운영됐음을 보여준다. 주요 출토 유물은 장란형토기, 호형토

기, 완(납작한 그릇) 등 다양한 기종의 생활 용기가 확인됐으며, 가옥 신앙・의 례와 관련된 조형 토기 등 당대인들의 정 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유물도 출토됐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전국 최대 규모 마한 대규모 취락 유적 인 담양 응용리와 태목리 유적의 사적 지정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문화재청, 담양군과 함께 체계적으로 보 존·관리·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확산

복지부, 2024년 6월부터 확대

광주시에서 시작된 최중증 발달장애 인 융합돌봄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지원

체계 마련과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 을 고려한 낮 시간 활동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 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24 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

애인 융합돌봄사업' 도입이 핵심이다.

현재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광 주서구장애인복지관 등 2개 복지관에서 16명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의 높 은 만족도 등에 힘입어 시행 첫해 보건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 라 2022년부터 3년간 국비 45억원을 지 원받는다.

또 현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 되면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 6월부터 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 /박선강기자



+